

이재명, 다시 '민생 드라이브'... 리더십 재건·내홍 수습

안양 찾아 자영업자 고충 청취...민주 지도부, 지원법안 개정 검토 '식사 정치' 통한 당내 소통 강화...인적 쇄신 요구엔 '아직 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 사태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사우나 업체 등을 찾았다.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획 일정'이었다.

이 대표는 전날 주재한 확대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입법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우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고위전략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책도 논의됐는데, 이차 완화안이 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원내 지도부는 그동안 여야 합의의 불발로 표류해 온 '정집 민생법안'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동시다발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간호법, 안전운임제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

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격화하는 당 내홍 수습 행보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개별 의원들과 간헐적으로 해오던 식사 모임 횟수를 부쩍 늘리는 한편 원외의 야권 인사들도 수시로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으로, 소위 '식사 정치'를 통한 소통 강화책이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인적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도부 회의 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개편이 필요하더라도 지금은 비명계에 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이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맞은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인 주요 당직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이미 당 조직이나 인적 개편에 대한 기본 틀을 짜둔 상태"라며 "이를 지금 실행에 옮기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 배

일시 | 2023년 3월 7일(화) 13시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尹 정부, 친일 매국정권으로 기록될 것"

日 강제징용 3자변제 철회 촉구...김건희·대장동 특검 수용 압박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인 양극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라고 말했다"며 "은 국민이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라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역사는 이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의 해법은) 한미일 군사 동맹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며 "앞으로 대(對)중국 봉쇄 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부활하고 이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박근혜 정권 당시 거센 비판을 받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이번 결정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비난했다.

윤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2015년 위안부 한일 합의의 전후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며 "과거의 역사에서 정부가 교훈을 얻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 여사가 운영 중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법조계

에서조차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 힘들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 '김건희 여사 추가조사 의혹 진상조사 데스크포스'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사의 의혹과 관련,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 김 여사 소환조사 통보 여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아울러 여론을 향해 김 여사 관련 의혹뿐 아니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수용 압박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 김 여사 특검에 한 장관과 여권이 회방을 놓지만 '윤석열 검찰'이 신뢰를 잃고, 돈 많은 자가 범인이라 사실에 변함이 없다"며 "국민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정의당과 협의해 단일안 추진...23·30일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른바 '쌍특검'의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추가조사 의혹 특별검사 도입안과 관련해 "정의당과 가급적 협의해 오는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며 "가급적 정의당과 협의해 단일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쌍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 방식에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180석이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으로써는 6석을 가진 정의당

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물가폭탄·금리폭탄·실업폭탄·부동산폭탄 등 4개의 민생폭탄이 터지고 있다"며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산하에 '4대 폭탄 처리 대응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위기와 관련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결을 위한 '베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을 혁신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세계 혜택을 담은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이병훈 의원, 법안 대표 발의

다이빙 풀이 '체육 시설'이 아니라 '수중레저 시설'로서 일반 수영장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사각지대는 지적(광주일보 1월 3일자 6면)에 따른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8년과 지난해 12월 광주의 잠수용 풀에서 교사와 수강생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다이빙 풀은 다른 수영장과 달리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은 7일 잠수풀장 등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수중레저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잠수풀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잠수풀장은 일

반 수영장보다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광주에서는 프리다이빙을 배우던 수강생이 5m 깊이의 잠수풀장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영장과 달리 잠수풀장은 체육 시설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잠수풀장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도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잠수풀장은 신고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고, 수중레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병훈 의원은 "안전에는 방심이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수심이 깊은 잠수풀장에도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

명품 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